

서평

문화와 정의: 배리 대 파레크

김 남 국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Brian Barry,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Bhikhu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London: Palgrave, 2000).

인류는 오래 전부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자신이 출생한 곳을 떠나 멀리 이동하는 이민의 역사를 경험해 왔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면 인류는 벌써 세계적 단위의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지구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고대와 근대의 지구화 경험은 21세기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지구화 현상과 적어도 세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 첫째는 변화의 속도에서, 둘째는 변화의 양에서, 셋째는 변화의 다양성에서 현재의 지구화는 이전의 모든 변화를 압도한다. 오늘날 지구화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과 노동의 균일하지 않은 분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의 지구화를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노동의 이동일 것이다.

대규모의 이주 노동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과 이윤을 쫓아 이동하는 자본의 우월한 지위에 따라 발생한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인종의 등장을 유입국가에 가져 온다.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학습된 행동과 신념을 말한다. 학습된다는 것은 본능과 구별된다는 뜻이고, 공유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화에 따른 문화적 갈등은 단일한 민족과 문화를 공유해 왔다고 믿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에서 더 큰 도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미래는 적어도 세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측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의 단일화를 뜻하는 이른바 맥도날드 현상이고, 둘째는 문명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문명 충돌론, 셋째는 문명의 혼합과 혼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문명 혼성론이다. 어느 입장에 서든지 국민국가의 경계를 전제로 형성된 다수문화의 윤리적 기반은 소수의 이질적인 문화의 등장에 따라 재조정 of 필요를 겪게 되고, 차이와 공존의 능력은 다문화시대의 주요 덕목이 된다.

사회적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여 문화보존의 권리, 문화적 대표의 권리, 문화적 자치권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즉,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보면 문화 집단에 대한 예외적인 존중은 개인 우선의 원칙이나, 자의성 회피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과 모순되는 논리적 혼란을 초래한다. 과연 다문화 시대에 소수 집단의 문화를 공공영역에서 존중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원칙 없는 타협의 길일까,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는 더 넓은 원칙의 길일까?

이 문제에 대해 영국의 다문화적 현실을 바탕으로 현대 정치이론의 영역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는 책이 브라이언 배리의 '문화와 평등' 과 비쿠 파레크의 '다문화주의 다시 생각하기' 이다. 문화적 권리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 배리와 파레크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배리는 개인사회의 평등을 문화적 권리보다 우위에 놓는 반면, 파레크는 평등을 성취하는 하나의 길로써 문화적 권리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배리는 1936년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 대학교, 런던정경 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가르쳤다. 현재는 런던정경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영국왕립학술원과 미국 아카데미의 회원이다. 파레크는 1935년 인도에서 태어나 런던정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험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는 2000년에 종신귀족에 지명됨으로써 영국상원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영국왕립학술원 회원이자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교수로 있다.

파레크는 소수 집단에게 예외적인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사회적 화합이나 문화적 다원성, 공동의 귀속감 등 집합적인 목표를 위해 가치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집단과의 평등만을 의식한 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평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 사회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아니며,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 역시 사회가 존중해야 할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과 함께 경쟁하는 다양한 가치들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 역시 중요하다.

문화의 차이를 하나의 기준에 의해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쿠 파레크는 인간의 공통성과 문화적 차이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그는 문화가 비교 불가능하고 오직 그 문화 내부의 논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절반만 맞다고 본다. 문화는 좋은 삶에 대해 독특하고 매우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환

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화의 비교 불가능성 주장은 맞다. 그러나, 파레크는 어떤 문화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 또는 보편적으로 공유된 인간의 특징들을 더 존중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문화집단은 실재한다고 보아야 할까? 파레크에 따르면, 오직 개인만이 존재하고 집합체로서 집단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인간의 집합체는 신념이나 실천, 그리고 의례 등을 통해 존재하며 그것들이 제도화되었을 때 지속되게 된다. 집합체는 개인들로 구성되지만 개인들 역시 집단에 의해 영향 받는다. 따라서, 두 개념 모두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문화집단의 실재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재미있는 주장을 이끌어 낸다. 전통적인 연방국가가 영토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들로 이루어졌다면, 문화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자치단체들로 이루어진 연방체제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레크는 영토, 주권,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한 근대국가가 그 적실성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새로운 국가 모델로써 주권의 공유나, 서로 다른 정도의 자율성을 누리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집합체를 구상한다. 그는 이러한 구상위에서 문화집단 역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문화집단에 바탕을 둔 정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파레크는 국가 정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는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공동의 귀속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모두에 의해 공유된 국가 정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국가 정체성 논의가 인종과 문화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입장들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는 최선의 생활양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는 정체성 논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유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파레크는 국가 정체성 논의의 필요와 그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다수 인종과 문화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성격을 갖거나, 과거의 원형에 집착하는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리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는 우리의 인종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지만, 정치적인 국민 국가에 대한 의무는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의 의미가 인종집단의 종합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생물학적인 조상을 따지는 것하고 인간의 필요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이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사업에 대한 협력을 쉽게 만들고, 시민들 사이의 재분배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이 특별한 정치공동체, 즉 국민국가의 내부에서 인종이나 문화 등 생물학적 분류에 따른 집단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한 국가의 문화가 반드시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단을 단위로 이루어진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도 베리는 문화가 공정의 의무를 따져야 하는 도덕적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베리에 따르면, 문화는 우리의 행동을 위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문화는 문제도 아니지만 해결책도 아니다. 베리는 문화가 공동의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없다는 문화의 비교 불가능성

이나 문화의 평등성에 대해 반대한다. 만약 모든 문화가 자기 폐쇄적인 도덕적 세계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문화의 차이나 갈등을 다룰 어떤 원칙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베리는 우리가 어떤 문화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문화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를 갖는 인권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베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비판을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화주의적 옹호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베리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단지 국가정체성을 공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시민들 사이의 강한 연대감은 공동의 제도를 공유하는 것과 빈부격차가 적을 때 가능하다. 소득격차가 너무 커서 사회의 부가 편중되면 부자들은 사회의 교육, 의료, 치안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회 간접자본을 구입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질 낮은 공공서비스와 이의 재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전체사회의 연대감은 당연히 약화된다. 베리는 공동의 제도와 적은 소득격차 및 충분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한 연대감을 여권에 기재되는 형식적인 국적과 인종에 따라 형성되는 국가정체성과는 구별되는 성숙한 시민의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베리가 정의하는 성숙한 시민의 정체성이 갖는 핵심요소는 동료시민에 대한 상호신뢰와 나에게 요구되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약속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종에 따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

나라, 모두가 똑같이 의존하는 공동의 제도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베리는 문화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집단에 근거한 정치를 비판한다. 베리에 따르면, 특별한 권리를 집단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손상시킨다. 나아가서, 한 집단이 내부적으로 동질적이고, 서로 배타적이며,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갖는 이해관계를 도외시하고 집단의 문화적 생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1988년에 출판되어 이슬람에 대한 신성모독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세계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루시디의 '악마의 시' 사건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파레크는 만약 아우슈비츠의 비극적인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고난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작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의 소설에 대해 분노하고 소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작가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작가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사회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즉, 작가는 사회의 관용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레크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나 집단적인 자존심을 지키려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베리는 조롱하고, 비웃고, 희화화할 수 있는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인 인권의 일부로서 문화나 종교의 압력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국정부가 루시디를 처벌하지 않거나 그를 이란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영국

의 문화의 일부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문제해결의 정당한 방식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믿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 배리의 입장이다. 즉, 이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떤 경우에서라도 영국의 입장은 인간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당하고 보편적인 원칙위에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 갈등의 사례는 우리사회에서도 서서히 늘어 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동성애 결혼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고,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인권과 차별의 문제도 이제 익숙한 주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한 모색에서도 배리의 주장처럼 소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파레크의 주장처럼 사회적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삶의 준거가 되는 문화와 종교가 존중 받지 못하고 그 맥락이 제거되었을 때 삶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편적인 하나의 원칙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제국주의적 정당화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특수성을 핑계로 반인권적인 관습이 온존하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의 준거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여 사는 다문화 시대의 민주주의는 국민국가 시대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차원의 문제해결을 필요로 한다. 배리와 파레크의 논의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게 된 이 쉽지 않은 길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